

대법, 유성기업지화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판결

노동 삼권 부정 판례 설 자리 잃어 ...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 노조파괴 사과하라” 유성지회, “해고자 여덟 명 남아” ... 발레오지회, “부당해고 14명 중 13명 정년퇴직”

대법원이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 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10월 4일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 라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년 4월 24일 1심판결을 부정한 대전고등법원의 2016년 7월 21일 재심을 확정했다.

대전고법은 “단체협약이 ‘쟁의 기간에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아니한다’ 라고 정한 이 유는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성기업이 시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차 해고를 의결한 행위는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삼권을 부정하는 판례가 설 자리를 잃었다. 황당한 논리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장 해제한 1심 판사 심준보를 비롯한 당시 천안지원 1 민사부 법관들은 엉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논평했다. 유성기업은 천안지원의 해고 판결 논리를 근거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펴부었다. 시측의 무지막지한 탄압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을 불러왔다.

유성기업지회는 “오늘 대법원판결을 출발 삼

아 이어질 2차 해고 판결 1차 징계, 3차 해고, 2차 징계, 3차 징계, 어용노조의 노조 무효 소송, 손해배상, 가압류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에 해고자 여덟 명이 남아 있다.

지회는 “해고자뿐 아니라 모든 유성기업의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8년의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국가 권력이 힘을 보탠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라고 요구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파괴를 시도하며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 스물일곱 명을 해고했다. 유성기업은 지회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재판에서 징계 절차 문제로 2012년 11월 1일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유성기업은 같은 해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 주요 간부 열한 명을 선별해 해고했다.

“한화 나와라. 방산 파업금지법 뒤에 숨지 마라”

삼성테크원지회 결의대회... “2년째 임단협 교섭 풀리지 않아. 공장 이전도 멋대로 추진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지회(지회장 정병준)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을 악용해, 지난해와 올해 교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한화그룹을 규탄하기 위해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지회는 10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한화 재벌 부당 경영권 승계 규탄과

방산사업장 노조 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 를 열었다.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원을 넘겨받은 이후 복수노조를 세워 지회를 탄압하는 한편, 삼성테크원을 다섯 개 법인으로 쪼개며 조합원들의 고용을 흔들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회와 합의 없이 정밀기계 공장의 창원 밖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삼성테크원지회는 한화그룹에

▲회사 분할과 부당 지분거래를 통한 불법 경영권 승계 중단 ▲복수노조 제도와 방산사업 파업금지 조항을 악용한 교섭 지연과 노조 무력화 중단 ▲정밀기계 창원공장 강제 이전에 앞서 고용안정 협약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 윤여철 임단협 가이드라인 분쇄한다”

충남 현대제철지회, 72시간 총파업 돌입 ... “현대차 기준 제철 90%, 로템 80%, 계열사 70% 수준 합의 강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1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제철지회는 총파업 첫째 날 당진공장 A지구 중앙대로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018년 임단협 투쟁 승리의 결의를 높였다.



정원영 지부장은 “현대차그룹 임금 가이드라인의 최종 목표는 노조 무력화다” 라고 꼬집었다.

후관 2부에서 일하는 김태식 조합원은 “현대제철은 꾸준히 임금과 상여금이 상승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은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느낀다. 올해는 꼭 그룹 노무라인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고, 현대제철과 단독 교섭으로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 라며 총파업 참가 결의를 밝혔다.

지회는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근거한 임금인상과 5조 3교대 도입 등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자본은 “주요 그룹사 대비 최상위 수준으로 임금인상안과 단협안을 제시했다. 더는 추가 안이 없다” 라며 현대자동차그룹 분사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다.

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 그러나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더 참을 수 없다. 조합원만 믿고 총파업 투쟁으로 임단협 투쟁 승리하겠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연 지회장은 올해 반드시 현대차그룹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열사 교섭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의했다.

지회는 “추석이 지났지만, 올해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대차그룹 분사가 계열사 노사관계를 지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임금 서열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현대제철 90%, 현대로템과 다이모스 80%, 나머지 계열사는 70%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희한한 가이드라인을 윤여철 부회장 주도로 관철해왔다” 라고 비판했다.

이경연 지회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현대제철이 2015년부터 그룹사 가운데 1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2018년 임단협에서 2014년 합의한 5조 3교대를 2020년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의 대안으로 인원충원을 통한 5조 3교대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제철 자본은 이미 합의한 5조 3교대제 요구에 관해 ‘노사 간 준비 부족’ 핑계를 대며 ‘2020년에 시행 시기를 논의하자’ 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노조파괴 원흉 이건희·이재용 일가 처벌하라”

삼성 노조파괴 사과·무노조 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검찰, 삼성 도운 노동부·경찰 기소 안 해

금속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이 검찰이 발표한 삼성 노조파괴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서 노조파괴 원인을 제공한 삼성 재벌 일가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

이 무노조 경영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자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 경영이념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노조탄압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노조파괴 행위 관련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와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까지 사찰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에 나섰다” 라고 밝혔다.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노동부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포섭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에 협력한 경찰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